

1주년 맞은 광주세계수영대회 레거시 '제동'

중투위, 수영진흥센터 건립 사업 다시 재검토 결정 세계지질공원 동아시아 플랫폼 건립 사업은 통과 광주 수영선수권대회 코로나 재확산에 개최 불투명

광주시가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레거시(유산) 사업으로 추진중인 한국 수영진흥센터 건립 사업이 중앙투자심사에서 다시 제동이 걸리면서 사업 추진이 늦춰질 전망이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중투위)는 최근 회의에서 수영진흥센터 건립 사업에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지난 4월에 이어 이번까지 중앙투자심사 위원회를 두 차례 통과하지 못한 것이다.

중투위는 지난 4월 회의에서 수영장 등 인근 체육시설과의 중복성, 전문 체육인 편의를 고려한 시설 규모 조정 등을 요구했다. 광주시는 사업비를 446억원에서 408억원으로 축소하는 등 계획을 수정했지만, 중투위는 이전 재검토 사유 보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투자심사위원회는 오는 10월에 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그만큼 사업 추진이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광주시가 세계수영대회 1주년을 맞아 추진하려던 광주 수영선수권대회도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개최 여부까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015년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레거시를 남기지 못한 게 아쉬워서 지난해 열린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수영진흥센터 건립과 광주 수영선수권 대회 등 2가지 레거시 사업을 추진했

다"면서 "수영센터의 경우 50m 레인을 설치하려 했는데 심사위원들은 남부대에 이미 레인이 있는데 중복해서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인식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50m 레인을 25m로 만들고 규모 있는 대회를 치를 때 기존 남부대 수영장을 이용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며 "보완책을 마련해 투자심사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1회 광주수영선수권대회는 8월 28일부터 9월 2일, 광주 마스터스 수영대회는 9월 26~27일로 일정이 잡혔지만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광주시는 2023년까지 남부대에 부지 6000㎡, 연면적 9750㎡, 지상 3층 규모로 국제 규격 경영 풀, 기념관, 선수 지원 시설 등을 갖춘 센터를 완공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4월 중투위 심사에서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던 세계지질공원 동아시아 플랫폼 건립 사업은 조건부 통과했다. 이

사업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인 무등산 인근 광주 생태문화 마을 조성 부지에 2022년까지 연면적 8000㎡ 규모로 지질·문화 복합 전시관, 세계지질공원 전자도서관, 체험장 등을 조성하는 것이다. 광주시는 애초 450억원이었던 사업비를 중앙위 재검토 결정에 따라 국비 158억원, 시비 169억원 등 327억원으로 줄였다.

이밖에 장엄기업 성장지원센터 건립(사업비 450억원), 평등산단 완충 저류시설 설치(407억원), 빛그린 산학 융합지구 조성(399억원) 등 사업도 조건부 통과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은 '적정' 판단이 나와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은 사·도의 사업비 300억원 이상, 시·군·구의 사업비 200억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을 중앙 위 투자 심사 대상으로 정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양식 우럭생산 어업인 돕기 전남도, 우체국소핑 특가전

전남도는 '코로나19'로 양식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럭 생산 어업인들 돕기 위해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우체국소핑 어업인돕기 기획 특가전'에 나선다.

이번 행사는 전남도, 여주시, 서남해수 어류양식수협, 전남지방우정청 등이 함께 진행하며, 우체국소핑을 통해 이 기간 동안 반건조 우럭 2마리(400g이상)를 9900원에 판매한다. 이와 함께 오는 20일부터는 우체국소핑물과 연계된 이베이와 11번가, 카카오톡 등에서 동일한 가격으로 특가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전라남도가 직접 운영 중인 남도장터와 함께 구방, 위메프, 옥션 등 20개 남도장터 제휴업체를 통해서도 이달 말까지 우럭 등 모든 수산물에 대해 19% 할인 쿠폰을 발행해 주는 할인행사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영조 전남도 수산유통기공과장은 "이번 우체국소핑물 특가전을 통해 판로가 막힌 어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수산물을 홍보해 소비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3월부터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공무원 대상 시식회와 할인판매 행사를 비롯 수산물 드라이브스루, 전국 GS수퍼마켓 수산물 판촉 기획전 등 다양한 수산물 소비촉진 활동을 펼쳐 52억원의 판매고를 올린 바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진행될 광주역 일대 전경. 광주시는 오는 2025년까지 광주역 일대 약 50만㎡ 부지에 1조원을 투입해 창업지원시설을 세우고, 기차역과 소핑·주거시설 등을 단일 건물에 갖춘 복합시설 건립을 추진해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로 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주역 도시재생 뉴딜 주민 주도로 추진

열린목공소·광주역 이야기 발굴 등 6개 사업 선정

광주시는 광주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인근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주민 제안 공모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창의적인 도시재생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해당 지역의 생활권자인 주민이 제안하고 직접 실행하는 주민참여형 생활 자치의 모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광주시는 지난 5월 7일~26일 사업을

공모해 다양한 아이디어와 제안을 받고 심사를 거쳐 열린 목공소 운영, 광주역 이야기 발굴 등 최종 6건을 선정했다.

사업 분야는 공동체 활동, 지역자원 기록, 도시재생사업 홍보, 교육 등의 생활 의제를 담고 있으며, 지원 금액은 사업별 500만원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 중 '열린 목공소' 운영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목공 수업을 하고 현 가구를 수선하는 것이다.

'광주역 이야기 발굴'은 대학생들이 광

주역 일대를 취재하고 잊혀졌던 광주역 이야기를 발굴하는 사업이다.

이밖에 마을을 기록하는 영상·사진 촬영,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바리스타 교육, 서포터즈 활동, 광주역 일대와 연계한 캐릭터 제작 등의 사업도 선정됐다.

임찬혁 광주시 도시재생정책과장은 "삶의 터전을 함께 하는 주민들이 직접 의제를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더욱 의미가 있다"며 "이번 주민 참여 공모사업이 광주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을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소유권 행사 어려운 토지·건물 등기 이전 가능

전남도,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 다음달 5일부터 2년간 한시적

14년 만에 시행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 2년간 소유권 행사가 어려운 토지나 건물 등을 간편하게 등기 이전할 수 있게 된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오는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특별조치법에 의해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경우를 비롯 소유권보존 등기가 안 된 미등기 토지에 대해 간편한 절차를 거쳐 등기를 할 수 있다.

적용 지역 및 대상으로는 ▲읍·면지역 토지와 건물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 농지와 임야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 시 지역 1988년 1월 1일 이후 편입된 농지 및 임야 등이 대상이다.

이번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시장·군수가 위촉한 보증인 5명중 3명 이상이 서명한 보증서가 필요하고, 시·군 지적부서에 보증서를 첨부해 등기이전을 위해 필요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단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 해당 토지 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소유권 변경등록

및 복구등록 신청을 사전에 해야 한다. 이 중 일반인 개인 또는 법인, 단체, 조합 등이 소유한 국가 귀속부동산이나 국공유지를 양도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장을 비롯 국세청장, 토지의 재산관리청 등이 발급한 '사실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신청된 토지에 대해 시장·군수는 보증서 발급 취지와 사실 관계 등을 현지조사 후 2개월 간 공고하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4촌 이내 친척 등 이해관계인에게 공고사실을 통지한다. 이에 대해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신청인에게 확인서가 최종 발급됨 방침이다.

확인서를 발급 받은 사실상 소유자는 확인서를 첨부해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하면 부동산 등기 이전이 마무리된다.

정애숙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특별조치법은 과거 세차례 시행된 특조법에 비해 보증 절차가 상당 부분 강화돼 신청 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며 "특히 보증인 5명중 3명 이상이 서명한 보증서(변호사, 법무사)가 1명 이상 의무적으로 포함돼야 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신청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보증수수료도 사전에 문의 후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 확대

광주시가 가정용 저녹스(NOx) 보일러(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지원을 확대한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4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으로 인해 가정용 보일러 교체 시 친환경 보일러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시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는 일반 보일러보다 초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의 배출이 8분의 1 수준이며 연료비도 연간 약 13만원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앞서 광주시는 올해 2월 1983대를 지원했으며, 하반기에는 3배 수준인 5850대를 추가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보일러 1대당 일반 20만원, 저소득층 50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하는 주택 소유주와 세입자로, 세입자 경우 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

광주시는 사업 내용을 각 자치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2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받을 예정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테크노파크, 제조기술 공유 플랫폼 개발 추진

광주테크노파크는 "인공지능(AI)과 뿌리 제조업 기술을 융합한 제조기술 공유 지능형 서비스 플랫폼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역 금형 분야 선도기업인 남도금형이 주관하고 AI 전문가인 비온사이노베이터, 자동차 전문기술을 보유한 조선이공대가 참여한다.

2022년까지 정부 출연금 25억원, 민간 부담 현금과 현물 10억원이 투입된다. 기술 개발로 현장의 유휴 시간 단축, 생산성과 생산량 30% 이상 증가, 불량률 90%

감소 등을 목표로 설정했다고 광주 테크노파크는 설명했다.

개발되는 플랫폼은 광주전남 11개 영세 제조기업에 기술을 공유하고 7개 공장 라인에서 실증을 거치게 된다.

김인권 광주 테크노파크 융합기술본부장은 "지역 기업 공장의 스마트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면 다양한 연구개발 사업을 연계해야 한다"며 "선도기업이 영세기업과 기술을 공유하는 형태의 사업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062-412-2800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사람은 자연에서 태어나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광주에서 30~40분 소요

수목장 *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수목장 묘지이장 문의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